"카드가 발급 됐습니다"…스미싱 피해 속출 '비상'

인터넷진흥원 "작년 공공기관 등 사칭 전년比 1천874% 폭증"

경찰청 집계 2022년 피해액 41억여원…보이스피싱 피해도↑

#A씨는 최근 '카드가 해외에서 발급됐고 본인이 신청한 사실이 없으면 연락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발신자가 평소 이용하던 카드사였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발신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카드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A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중고거래 사기에 연루됐고 구속 수사를 면하려면 공탁금을 이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당황한 A씨는 사기범의 말을 믿고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

#B씨도 얼마 전 '카드가 발급됐고 본인 요청이 아니면 사고 예방을 위해 접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보이스 피싱을 의심한 B씨는 해당 카드사에 확인을 위해 연결을 시도했으나 '상담 고객이 많다'는 안내 멘트만 30분 이상 들었다. 답답한 마음에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로 연락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목돈을 이체했다.

최근 카드 발급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스미싱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 쿠폰 제공', '모바일 청첩장', '카드 발급 및 사용'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카드 발급 관련 스미싱 문자의 경우 '[○○카드] 고객님(5566) 카드가 발급됐습니다. 본인 요청이 아니시면 사고 예방 접수 바랍니다'와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룬다.

주로 국내 유명 증권사나 카드사, 은행명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이기 때문에 수신자들은 메시지에 신뢰감을 갖게 된다.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명의 도용으로 카드가 발급될 시 결재를 하는 순간 바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는 피해자들은 공식 고객센터를 찾기보다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로 급히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카드 발급 확인 차 전화를 거는 순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휘말리게 된다.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건수가 2022년 1만7천726건에서 2023년 35만10건으로 1천874% 폭증했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18-22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해 금액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 2억3천500만원, 2019년 4억1천900만원, 2020년 11억700만원에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49억8천500만원 41억300만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천965억원으로 전년 피해액인 1천451억원 대비 35.4%(514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스미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카드 발급 관련 문자가 왔을 경우 반드시 카드사 공식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문자메시지 속 인터넷주소나 번호 등은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경우 상대방이 개인정보나 자금 등을 요구한다면 절대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12 또는 금융감독원 보이스 지킴이 1332로 신고하고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계좌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은솔 기자

'억대 금품 수수' KIA 장정석·김종국 기소

광고 편의 대가 돈 받아 착복…박동원에 세 차례 2억 요구 혐의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7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김모(65)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7-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10월 야구장 내 감독실에서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별도로 김 전 감독은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단장은 김씨의 요구사항을 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해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이후에도 각종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감독은 김씨의 요구사항을 장 전 단장에게 전하고, 구단 광고 담당 직원에게도 김씨 업체의 직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실제로 김씨 업체가 야구단이 직접 관리하는 유니폼 견장, 포수 보호장비, 스카이박스 광고는 물론 별도 광고대행사가 관리하는 백스톱, 외야 펜스 홈런존 광고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금품수수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KIA의 열성 팬인 김씨가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 명목으로 준 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받은 1억원을 5천만원씩 나눠 가졌고 금품수수 사실을 구단이나 선수단에 알리지 않은 채 대부분을 주식 투자, 자녀 용돈, 여행비, 개인 간 돈거래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장 전 단장에 대해서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했다. /안재영 기자

'억새' 제거작업 광주 서구는 수질 정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가을 내내 은빛물결 출렁이며 볼거리를 제공했던 억새 제거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억새 작업은 '서창억새축제' 구간인 영산강변(극락교-서창교)에서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됐다. 〈광주서구 제공〉

'승진 청탁' 경찰관 4명 "혐의 인정"

'승진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전남경찰 소속 현직 경찰 4명과 브로커 2명 중 대다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7일 제삼자 뇌물교부 또는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4명과 인사 청탁 브로커 2명과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경찰 고위층과 친분이 깊은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와 전직 경감 출신 브로커 이모(66)씨는 각기 사기 사건 수사 무마 또는 또 다른 인사 청탁 등에 연루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전남청 내 인사 청탁 비위와 관련해 추가 기소됐다.

브로커들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네 기소된 현직 경찰은 양모(57) 경정, 강모(56) 경감, 임모(51) 경감, 이모(56) 경감 등이다. 브로커 성씨는 양 경정과 임 경감으로부터 승진·전보 인사 청탁을 받고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안재영 기자

'오월의 꼬마' 영정 속 희생자 '계엄군 총탄 사망' 확인

카빈총 사망자 26명 중 25명 계엄군 M16에 사망 판명

'오월의 꼬마'로 알려진 조천호씨의 부친과 카빈총 사망자 25명이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7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천호씨의 부친 조사천씨는 1980년 오월 항쟁 당시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 발포 희생자가 명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조씨의 사망원인은 시민군의 총탄에 의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번 조사 활동으로 확실히 바로 잡혔다.

당시 조씨의 시신을 검안한 광주지검 검시 기록에는 조씨의 사망원인을 시민군의 카빈총에 의해 5월21일 광주기독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 때문에 일부 왜곡 세력은 총상 희생자 중 상당수가 시민들끼리 총을 쏴 사망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1997년 5·18 민주묘지(구묘지)를 지금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무덤에서 나온 총알 파편을 국방부로 보내 감정 의뢰했다.

해당 파편에 대한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감식결과 M16 총알 탄피로 확인돼 당시 조씨의 검시 기록이 잘못된 것임이 명백해졌다.

사망 장소로 기재된 광주 기독병원도 조 씨의 시신이 확인된 곳일 뿐, 피격 지점은 계엄군 집단 발포가 자행된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주변이라고 조사위는 결론 내렸다.

또한 조씨처럼 시민군에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카빈총 사망자 26명을 조사위 법의학 자문단이 재검증한 결과 이 중 25명이 계엄군의 M16 소총에 사망한 것으로 판명 났다.

기존 검시조서는 시신의 총탄 사입구와 사출구의 크기만으로 M16 사망인지, 카빈총 사망인지 특정했는데 법의학적으로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계엄군의 총격 사망이 명백하거나 시민군이 무장하지 않은 1980년 5월21일 이전에 사망한 희생자도 카빈총에 의한 사망으로 기록됐다. /주성학 기자